ESG 자문 그룹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2021년 Vol.9

DR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으로, 최근 국내외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기업의 재무적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존의 방식과 달리 이제 기업은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ESG를 통해 새로운 사업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가치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ESG 자문 그룹을 출범하였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오광수, 이규철 대표변호사가 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기업 법무 전문가인 이상봉 변호사가 팀장으로서 주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의 주요업무는 1) ESG 규제 및 리스크 관리, 2) ESG 경영전략 수립, 3) ESG 실사, 4) ESG 책임투자, 5) ESG 보고서 작성 및 공시, 6) ESG 소송 등 분쟁해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대륙아주 ESG 자문 그룹은 ESG 흐름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격주로 ESG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등을 소개한 주요 기사를 수집하여 공유드리고,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층리포트를 함께 발송드릴 계획입니다.

ESG 관련 행정부 동향소개

산업통상자원부 – 섬유 · 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11일(수), 섬유 · 제지 업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섬유 · 제지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4월부터 산-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R&D 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핵심 감축기술을 도출하는 등 기술개발 방향 및 내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경우 바이오매스 유래 원료 대체 확대, 섬유 제조공정 혁신, 재생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사용량 및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이며, 제지산업은 지류 경량화, 공정 부산물 활용 자원화, 건조공정 에너지 전환(스팀→전기)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할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실증까지 지원함으로써 업계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섬유 · 제지산업 탄소중립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별첨1][보도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섬유 · 제지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토론회'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8월 18일(수)~8월 19일(목) 양일간 정부세종청사 11동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6일 공포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로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종료일인 8월 23일을 앞두고 노사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특히 노사의 핵심 이슈인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토론회 자료는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2-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자료(Ⅰ)

[별첨2-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자료(Ⅱ)

고용노동부 – 10월까지 '무관용 원칙'의 "위험현장 집중 단속기간"운영

고용노동부는 8월 20일 안경덕 장관 주재로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하는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안경덕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추진 등 다양한 노력에도 사망사고가 기대만큼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용 없는 엄정한 감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불량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지역별 업종분포, 사망사고 요인, 발생형태 등을 심층 분석하여 지역 특성화 감독도 추진 예정입니다.

[별첨3][보도자료]고용노동부 장관 주재 산재 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회의 개최

주요기사 소개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최근 ESG 정보 공시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올해 대규모 국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를 도입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8월 23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제18호'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ESG위원회를 도입한 코스피200 기업은 76개사(38%)이며, ESG위원회 중 61개(79.2%)는 관련 조직을 올해 신설·확대 개편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편 코스피200 기업의 ESG위원회 규모는 평균 4.4명으로, 사외이사 비중은 평균 75.6%, 위원회에 대표이사가 포함된 경우는 55.8%, 위원장이 사외이사인 경우는 80.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ESG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하지만 ESG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대표이사가 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코스피200 기업 38%, 'ESG위원회' 도입 했다 (파이낸셜뉴스 8.23일자 보도)

2. 아직 통일된 지속가능보고기준(ESG 공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ISSB 및 KSSB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ISSB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이 산하에 설립하려는 위원회인데, 이곳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될 지속가능보고기준(ESG 공시 기준)을 만들게 되며, KSSB는 ISSB에서 제정되는 ESG 공시 기준이 국내에서 채택·사용될 때 이를 심의·의결·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과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장의 인터뷰에 따르면, ISSB는 먼저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를 기반으로 '기후 변화' 관련 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제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국내에서도 ISSB에 발맞춰 기후 변화 관련 기준을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기후 다음에 ISSB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환경(E) 분야에서는 자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는 바, 기업에서도 이와 같은 방향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독] 서정우 KSSB 준비위원장·김의형 회계기준원장 "첫 ESG 공시 기준은 '기후 변화'" (조선비즈 8.23일자 보도)

3. ESG 경영과 관련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금융권에도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 가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파괴와 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한 위험관리체계로서, 환경과 사회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업에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강제성은 없으나 국제사회 개발사업에서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금융산업의 표준으로 여겨지는 바, 미국 JP모간·웰스파고, 영국 로이드·바클레이, 일본 미즈호·스미모토, 중국 산업은행 등 주요국 대형은행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23일 하나은행이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마지막으로 적도원칙 회원이 되었으며, 국책은행에도 적도원칙 가입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시중은행 ESG 타고 적도원칙 가입 바람, 국책은행은 산업은행이 주도 (비즈니스포스트 8.23일자 보도)

4.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세계적인 ESG 평가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 사이트에 공개된 기업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 세계 3,456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기업 ESG 리스크 지도' 보고서를 22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홍콩 등 아시아 기업의 ESG 관련 사건·사고 우려가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기업과 비교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금속, 철강 등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업종별 분석결과 ESG 리스크가 큰 업종은 금속, 철강, 비철금속, 오일가스, 우주항공·방산 등이며, 반면 섬유·의류, 운송인프라, 미디어, 포장, 소매업 등은 ESG 리스크가 작은 편이었습니다. 한편 ESG 위험성이 큰 기업들은 최근 3년새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사건·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경련 관계자는 "사건·사고의 파장도 중요하지만 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위기 관리 등급의 차이를 가져온다"면서 사고 발생확률을 낮추고 사건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별 ESG 리스크 우려, 韓·中이 유독 큰 이유는? (중앙일보 8.22일자 보도)

5.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도입에 대해 '선도'가 아닌 '신중한 추종'이 바람직하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습니다. 상장협은 "ESG를 의무화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업이 목적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며 "불가피하게 공시제도를 강제하게 되는 경우라도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최소한으로 도입·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는 규제 비용부담에 따라 원가경쟁력 저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주요국들이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까지 국내에서 선제적인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미 도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일정을 연장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ESG 공시 의무화' 속도조절론 등장… 상장협 "미국은 이제 논의 시작단계" (머니S 8.24일자 보도)

6. 위 주장과 유사하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면 기업은 ESG 추진에 수익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부는 규제 관점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ESG의 지배구조 개선과 기업가치' 보고서를 통해, 기업이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ESG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ESG가 재무적 성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는데 주저하게 된다고 밝히면서, ESG가 기업의 수익성을 보장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ESG는 자본시장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장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압력이나 규제 관점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 ESG 추진에 수익성 고려…정부는 규제 접근 지양해야" (아시아경제 8.18일자 보도)

대륙아주 ESG 동향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18일 '한국산업단지경영자협회(산경련) 회원사 및 입주기업의 기업애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 강의, 중대재해와 ESG관련 자문 및 컨설팅, 아카데미 참여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협조 등을 합의했습니다.

대륙아주-산경련, 업무협약 체결···"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서울경제 8.18일자 보도)



이상봉 파트너변호사
ESG, 건설/부동산, 기업자문
E sblee@draju.com
T 02-3016-5276



기소현 파트너변호사
ESG, 기업자문, 금융
E shki@draju.com
T 02-3016-8702



노현철 파트너변호사
ESG, 국제, 기업자문
E hcnoh@draju.com
T 02-3016-8730



박경석 변호사
ESG, 기업자문, 에너지/인프라
E parkks@draju.com
T 02-3016-5388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8,10~16층
T. 02-563-2900 **E.**draju@draju.com **H.** www.draju.com